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50
----------	------

발의연월일 : 2024. 12. 12.

발 의 자 : 박용갑 · 박희승 · 복기왕
강유정 · 박 정 · 정준호
조인철 · 장철민 · 손명수
추미애 · 박홍근 · 김영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따른 예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도 외국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으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간소한 절차를 밟고, 비자발급 필요국인 경우도 비자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음. 특히 외교관여권은 해외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 처벌이 면제되고 재판받을 수 없으며 불체포특권도 누릴 수 있는 등의 사법상 면책

특권이 있음.

이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및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탄핵결정을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등에 대하여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대통령에 대한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 ----- ----- ----- -----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탄핵결정을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등에 대하여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